

“2024년 예산안에서 R&D, 민생사업 예산 감액하면서 대통령·국무총리 등 고위공무원 월급은 인상, 과거 사례처럼 고위공무원은 월급 인상분 반환해야”

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이 어렵다면서 민생사업 및 R&D사업 예산을 감액하면서 고위공무원 월급을 그 이하직과 같이 2.5%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하였다.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거나 지출구조 조정으로 재원이 한 푼이라도 마련해야 할 때 고위공무원은 인상분 반납 등 상박하후 구조의 처우개선율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편성이다.

과거 공무원 월급 인상과 관련된 처우개선율을 보면 2018년에는 고공단 이상 2.0%, 그 이하직은 2.6%였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고위공무원단은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기부를 하여 왔다. 그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할 때 조차 고공단 등 고위직은 월급 인상분을 반납하거나 그 이하직보다 낮게 인상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서 모범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.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대통령, 국무총리 등 고위직 처우개선율, 즉 월급 인상율을 그 이하 직과 같이 2.5%로 편성하였다.

<별첨> 최근 10년간 공무원 처우개선율

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강조하면서 R&D 예산,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민생사업 예산, 심지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사업 예산도 감액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, 고위공무원 임금 인상분에 대한 조치는 없이 하위직과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옳지않은 처사이다.

* (전부처) R&D 예산 △5.2조원 감액 (23년 31.1 → 24년안 25.9조)

(고용부) 청년내일채움공제 △4,206억원 감액 (23년 6,403 → 24년안 2,197억)

(교육부)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△15억원 감액 (23년 20 → 24년안 5억)

민주당은 2024년 예산안 국회심사 과정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 고위직의 출선수
범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고공단 이상 월급인상분을 반납하도록 할 것이
며,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민생사업, R&D 등 미래투자 사업 예산이 증액되는데
보태도록 할 것이다.

2023. 9. 20.


더불어민주당
정책위원회 의장 김민석,
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운식

〈별첨〉 최근 10년간 공무원 처우개선율(인사혁신처 제출자료)

연 도	공무원 처우개선율(%)	
	고위직(고공단 이상)	그 이하 직
2014년	3급 이상 반납	1.7%
2015년	3.8%	3.8%
2016년	3.0%	3.0%
2017년	3.5% (정무직 이상 반납)	3.5%
2018년	2.0%	2.6%
2019년	고공단 이상 반납	1.8%
2020년	고공단 이상 반납	2.8%
2021년	고공단 이상 반납	0.9%
2022년	고공단 이상 반납	1.4%
2023년	장차관급 이상 10% 기부 및 4급 이상 반납	1.7%
2024년	2.5% (예정)*	2.5% (예정)*

※ 처우개선율 2.5%는 정부안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결정 예정